
2012 도시안전실 주요업무계획



2012. 1. 17.

도 시 안 전 실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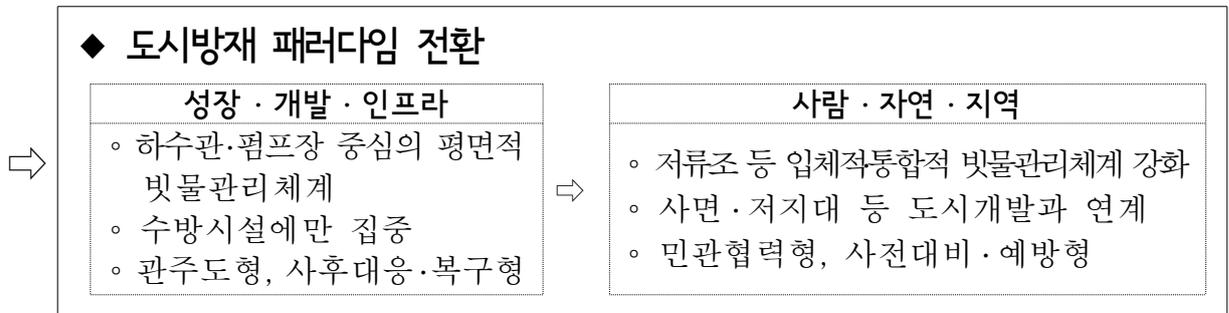
I .	정책환경과 목표	1
II .	주요사업 추진계획	5
	1. 기상이변에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	5
	2.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서비스 제공	11
	3. 시민에게 안심주는 도시시설물 관리	14
	4. 도시의 수준을 높이는 도로·보행 환경 조성	20
	5. 삶의 질을 높이는 물환경 조성	26
III .	제도개선 및 법령개정	30

I. 정책환경과 목표

1 정책환경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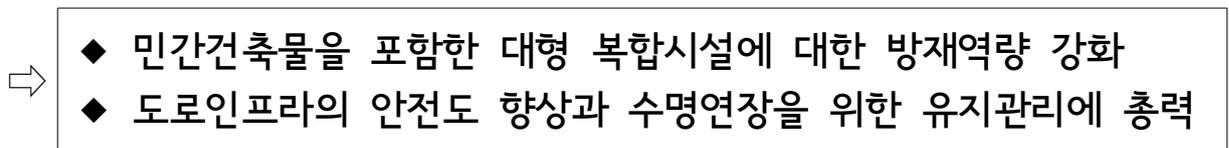
□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도시방재 패러다임 전환 필요

-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년 평균 강우량 7% 증가
 - 최근 30년('81~'10) 1,450mm → 최근 10년('01~'10) 1,548mm로 증가
 - '10년(2,017mm), '11년(10.24일 현재 1,971mm) 연속 높은 강우량 기록
 - '10.1월 기습 폭설 25.8cm (기상관측이래 최대)



□ 도시복합개발 및 시설물 노후화로 대형 복합재난 대비 필요

- 건축물의 고밀도·초고층 추세, 지하공간 증가로 위험성 대형화
 - 도시시설물 21,322개('05) → 35,716개('11)
 -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2개, 지하연계 건축물 114개 (고밀도 세계5위)
- 도로, 하수 시설 인프라는 노후화되는 반면 관리자원 감소 추세
 - 도로시설 531개 시설 중 20년 이상 56%, 30년 이상 시설물 27%
 - ▶ '04년대비 '11년 유지관리 인력 27%, 예산 30% 감소
 - 하수도 시설 10,291km중 20년 이상 55%, 30년 이상 시설물 17%



□ 도로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인프라 지속 정비 필요

○ 순환도로 정비수준 미흡 및 연결성 부족으로 도로 효율성 저하

- 도시고속도로 이용 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습정체 발생

※ '08년 교통혼잡비용 7조2,315억원 (버스 및 화물차 44.4%)

○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·보행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필요

- 보도 및 도로포장, 공중선 등 생활주변 안전편의 향상 필요



- ◆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높여 도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
- ◆ 도로·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□ 인구구조변화 및 삶의 질 요구증가로 생활안전 확충 필요

○ 취약계층 증가로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

- 장애인 414,522명, 독거노인(홀로 사는 노인) 221,324명, 쪽방촌 3,280명, 저소득층 207,486명

○ 재해재난 증가로 생활안전서비스 관심 증가

- 구호구급 11,808명('05) → 16,407명('10)

○ 물환경 기준 강화로 이와 연계된 안전한 물순환 시스템 필요

- '12.1월 물재생센터 방류수 총인 강화 및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, '13년 6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



- ◆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전서비스 강화
- ◆ 깨끗하고 안전한 물 순환체계를 조성하여 건강한 물환경 제공

2 체계도

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



Ⅱ . 주요사업 추진계획

1. 기상이변에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

① 생활안전도시 기반 마련	6
② 지역 맞춤형 수방대책 추진	7
③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	9
④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	10

1 생활안전도시 기반 마련

도시안전에 대한 통합적 도시방재 기능 강화와 최소 안전기준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,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운영으로 생활안전도시 구현

□ 추진방향

- 생활안전도시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법규 제정
- 도시안전의 목표 및 분야별 방재기준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활용
- 시민과 함께하는 민·관·군·경 협조체계 구축 및 마을 단위 생활안전 추진

□ 추진계획

-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조례 제정
 - 서울형 안전관리 기본 이념, 재난관리 주체의 책무, 시책사업, 재정지원 등 제도화
- 서울형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
 - 비전과 목표, 분야별 도시방재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
 -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과 방재계획 연계
- 도시안전 가이드라인 개발
 - 각종 재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개발, 재난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에 활용
-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성 운영
 - 민간단체·시민(36만명)이 참여하는 민·관·군·경 협조체계 구축
 - 마을단위 위해요소 감시·예방, 안전문화 확산으로 생활안전 추진

□ 기대효과

- 도시안전분야 최상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확보
- 도시안전의 정책수립시 필요한 규정 마련과 민·관이 함께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확보로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확립

2 지역 맞춤형 수방대책 추진

7.27 수해피해를 반성하고 기상이변을 일상화된 도시환경으로 간주하여 기후변화 대응, 지역 맞춤형 재해대응체제 구축

□ 추진방향

- 기존 치수시설 위주사업에서 지역 맞춤형, 생활밀착형 수방대책으로 전환
- 지형·환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수해 안전망 구축
 - 선제적 수방기준 적용 : 시간당 강우량 75mm → 100mm 수준
 - 수해취약지역 종합 개선대책 추진(10년간 5조원)

□ 추진계획

-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(34개소) 등 서민생활 기반시설 수준 강화

〈 주요 수방시설 보완 〉

- 하수관거 통수능력 향상 : 침수지역 및 저지대 51.9km
- 침수지역 수방시설 확충 : 빗물펌프장 25개소 신설·증설, 노후펌프 교체
- 빗물저류조 9개소 등 물순환시스템 개선

- 우기전 방재시설물 확충

- 저지대 침수지역(4만가구) 소규모 침수예방사업 우선시행(8,600세대)
 - ▷ 물막이판(6,000개소), 수중펌프(2,200대), 옥내역지변(26,500개)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(57억원)
- 침수 예·경보시스템 보강
 - ▷ 침수취약지역 관거수위 실시간 모니터링

※ 7.27수해 긴급 복구사업 205개(1,493억원)중 70% 완료

-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강화

- 침수취약 서민 반지하주택 공무원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
- 교통통제 훈련, 재난안전한국훈련, 외수침수대비 모의훈련 시행(4~5월)

○ 서울 재난관리 거버넌스 활성화

- 군경관민 협조체제 구축('12.5월)으로 재난대응 강화
- SNS, 커뮤니티 맵, 지역협의체 등을 통한 시민 참여 네트워크 구축

구분	주체	제공정보	비고
S N S	시민	▶ 제안,비판,토론	ON-LINE
커뮤니티맵	시공 민공	▶ 시설개선 요구 ▶ 피해사항 등록	
홈페이지	시공 민공	▶ 수방정보 제공	
지역협의체	시민	▶ 재난대비·대응	OFF-LINE



○ 사면위험지역 관리

- 산사태 위험지역 분류 및 예방체계 구축
 - ▶ 사면 전수조사후 DB구축 및 산지사면 위험등급 분류, 산지 관리기준 마련
 - ▶ 산사태위험 예경보시스템 개선, 시민대피요령 등 산사태 대응 매뉴얼 수립
 - ▶ 산지구릉지(110개소) 연차별 사방사업 추진
- 도로사면(1,178개소) DB구축 및 체계적 관리
- 주택가 축대·옹벽 등 위험시설(7,500개소) DB구축 및 체계적 관리

□ 광화문,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현안사항

○ 광화문 지역

- 단기대책으로 90mm/hr 수준 처리 가능 ⇨ 30년 빈도 이상에서 일시 침수허용
공청회 개최 의견 청취후 결론

○ 신월동 지역

- 시설개선이 필요하며, 제물포터널과 연계하여 대심도 시설 설치 ⇨
제물포터널 연계 설치 타당성 추가검토

3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

종래의 하수관, 빗물펌프장 등을 이용한 배수위주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빗물관리로 치수이수(利水)환경측면을 고려한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

추진방향

- 빗물의 침투·저장·이용시설 확충 등 서울형 빗물관리시스템 마련
- 보·차도, 주차장 등 불투수층을 자연배수로 전환
 -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물 순환 체계 악화(불투수율 7.8% → 47.7%)

추진계획

- 빗물관리 목표량 240% 증대 : 285,383m³('10년) → 687,273m³('20년)
- 서울형 빗물관리시스템 도입
 - 배수유역별 빗물관리 대책량 산정,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
 - ▷ 유역별 대책량 및 분야별 빗물관리시설 설치 표준안 마련('11.3~'13.3)
 - ▷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(침투이용 각 2,200m³, 저류 62,360m³) 설치('12)
 - ▷ 주택정비사업의 빗물관리시스템 구축('12)

문제점 및 개선방안

- 주택, 상업시설 등 대부분 불투수층인 민간시설이 빗물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제외 ⇒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건의(환경부)
 - 지붕면적 1,000m² 이상 공공시설(공공청사, 종합운동장 등) → 공동주택, 학교 등 추가 확대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)

기대효과

- 도시 전체의 배수능력 향상으로 인한 수해발생시 피해 감소
- 친환경적인 물재생으로 사회적 처리 비용 절감

4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

최신의 IT 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로 재난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서울 구현

사업목표

- 접근성이 강화된 첨단 재난종합상황실 구축
-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 통합 DB 구축
- 시민참여형 재난 정보의 공유 및 전파 체계 구현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1년 ~ 2014년(1~2단계)
- 사업내용 : 재난종합상황실 및 스마트재난안전시스템(1,2단계)구축

추진계획

- 재난종합상황실 이전(신청사) 구축
 - 상황실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, CCTV 영상정보통합(5개기관 CCTV 979대)
 - 재난관리 정보화 전략계획(BPR-ISP) 수립
- 스마트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
 -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내부용) 및 포털서비스 구축(대시민용)
-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
 -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전략계획 결과에 따라 단계별 추진

기대효과

- 첨단 종합상황실의 단계적 구축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
- 효과적인 재난 정보와 자료 제공으로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
- 재난정보 DB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상호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대시민 재난대응 서비스 수준향상

2.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서비스 제공

① 재난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

12

②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

13

1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

고령자, 어린이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안전망 구축

□ 사업개요

○ 일반현황

- 장애인 414,522명, 독거노인 221,324명, 쪽방촌 3,280명, 저소득층 207,486명

○ 사업목표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생활안전 확보

□ 추진계획

○ 쪽방촌,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

- 축대, 담장, 보도, 가로등 등 노후시설 정비(연 3~6개소)

○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확대

- 전기가스, 창호·장판 등 무상점검 정비

○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조치 적극 추진

- 공공시설은 '13년까지 보수공사·검사 완료, 민간시설 안전조치 감독

-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검사, 보험가입,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

○ 고령자 재난안전 보호활동 다양화

- 폭염, 한파시 고령자 등 안전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

- 무더위 및 한파 발생시 피난처인 쉼터 시설개선 및 확대 설치

○ 어린이 재난안전교육

- 구호활동가, 의용소방대, 퇴직자 등 안전교육 강사 육성

- 유치원생·초등생 교육,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

○ 시민신고 채널 다양화

- 119, 120, 서울안전지킴이(앱/모바일사이트)

- 생활주변 위험요소(시설물, 공사장, 위해물질 등) 접수 처리

2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

지역주민,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마을단위 안전공동체 구축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추진방향

-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마을 개선사업 발굴추진
- 안전마을 인증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안전 인식 고취

추진계획

○ 추진내용

- 아파트 단지, 주거상업지역 등 생활권 단위 마을공동체 생활안전망 구축
 - ▷ 유흥업소 주변지역, 단독가구, 다세대 주택가 등
- 민간단체, 시민중심 생활안전거버넌스 구성 및 활동
 - ▷ 재난안전네트워크, 안전지킴이 봉사단, 지역자율방재단 등
 - ▷ 재난위험도 조사, 생활안전기준 및 목표설정, 마을안전계획수립, 위험감시 예방 또는 재난복구 지원 활동

○ 추진방법

-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안전마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
 - ▷ 전문가, 단체, 시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
- 지역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후 인증
 - ▷ 시범사업 실시 후 지정효과, 선도성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
- 인증마을에 대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전파

○ 추진일정

- '12.2~6 : 안전마을 개념, 평가방법, 평가지표, 인증기준 등 마련(시정연 정책과제)
- '12.7~'13.2 : 안전마을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 (안전마을 인증 : '13년부터)

기대효과

-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으로 안전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마을환경 조성

3. 시민에게 안심주는 도시시설물 관리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① | 재난위험시설 해소 | 15 |
| ② | 전문가,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| 16 |
| ③ | 도로시설물 내진능력 강화 | 17 |
| ④ | 하수관거의 체계적 유지 관리 | 18 |
| ⑤ | 공동구 설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공중선 지중화 추진 | 19 |

1 재난위험시설 해소

재난위험시설물(D,E급) 해소(보수·보강, 철거 등) 추진 및 붕괴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안전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서울 구현

사업개요

- 안전관리 대상시설 : 35,716개소
- 재난위험시설 : 205개소(재난위험시설 473개소중 공사장268 제외)

구 분	계	중점관리시설(A ~C급)				재난위험시설(D~E급)		
		소계	A급	B급	C급	소계	D급	E급
합 계	35,716	35,243	11,822	19,690	3,731	473	432	41
시특법	8,983	8,979	1,658	6,996	325	4	3	1
기본법	26,733	26,264	10,164	12,694	3,406	469	429	40

추진계획

- 공공 소유 시설(13개소) : '13년까지 해소완료
- 민간 소유 시설(192개소) : '16년까지 해소완료(E급은 '13년 완료)
- 붕괴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: 7개소(민간소유시설)

※ 205개소 : 소규모 주택 69(25), 아파트 62(2), 연립주택 27(5), 옹벽 20(4), 판매시설 14(4), 기타 13(1)

문제점 및 개선대책

-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건물주의 관심부족으로 재난위험 시설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상존
- 민간시설 E급(39개소 : 이주완료 21, 사용중 16, 옹벽 2)중 사용중인 건물에 대해 응급안전 조치 지원

2 전문가,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

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여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도시 구현

시설물의 환경 변화

- 도로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노후화
 - 시설물 수 : '98년 338개소 ⇒ '11년 531개소(57% 증가)
 - 20년 이상 : '98년 139개소 ⇒ '11년 295개소(112% 증가)
 - ※ 숲 도로시설물중 20년이상 295개소(56%), 30년이상 145개소(27%)
- '04년도 대비 유지관리 인력 27%, 예산 30% 감소

추진계획

- 시설물 주치의(외부전문가) 안전점검 활동 강화
 - 중요시설물(101개소)에 대한 취약시기 안전점검 강화(년 2회 ⇒ 년 4회)
 -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 주치의 추가 지정(24개소)
 - ▷ 안전도 B등급 이상 확보 : '11년 97.9% → '12년 98.1%
 - 2종 및 법정외 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의무화(424개소, 년1회)
-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확대
 - 안전관리 전문가 분야별 인력풀 확대
 - 시의원,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확대 실시(8회 → 12회)
 -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시행(년 4회)
- 24시간 과학적 교량관리
 - 한강교량의 실시간 안전감시를 위한 계측시스템 운영(특수구조 9개 교량)
 -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점검 실시(광진교 등 12개교량 교각 314기)
- 터널 방재 대응능력 향상
 - 노후방재시설물 교체(송풍기, 화재감지센서, CCTV 등)
 - 위기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(자체훈련 월1회, 유관기관 합동훈련 년2회)

문제점 및 개선방안

- 노후화로 보수물량 증가와 유지관리 예산 및 안전관리 인력 부족
- 예산실링제 제외 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용방안 검토

3 도로시설물 내진능력 강화

일본 등 빈번한 해외 지진재난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

사업개요

- 도로시설물 : 531개소(지상구조물 349, 지중구조물 182)
- 내진성능 미확보현황 : 교량 등 지상구조물 105개소(30%)
 - ※ 터널등 지중구조물 : 내진성능평가 기준 제정('11.8, 국토해양부)으로 '13년 내진성능 평가 후 연차별 추진
- 총사업비 : 1,318억원

구 분	총 계	2011 이전	연도별 추진				
			계	2012	2013	2014	2015년 이후
총사업비(억원)	1,318	332	986	304	305	177	200
보강공사(개소)	122	17	105	10	16	37	42

추진계획

- 현저고가 등 6개소 내진보강공사(설계2, 보강공사4, '12년)
 - 사업비 : 74억원, - 사업기간 : 2012. 2 ~ 12
- '14년까지 지상구조물의 81% 내진성능 확보
 - 1·2종 시설물과 재난복구에 필요한 33개 주요노선 우선 추진
 - 중요노선 이외의 소규모 법정외 시설물 보강('15년 이후)

문제점 및 보완대책

- 사업비 일부 반영으로 내진보강 지연 불가피
 - '12년 예산 : 10개소 304억원 요구 ⇒ 3개소 74억원 반영
- 내진보강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특별회계 사용방안 검토

4 하수관거의 체계적 유지관리

침수피해지역 및 안전을 저해하는 노후·불량 하수관거를 중점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보호 및 안전도시 구현

사업개요

○ 하수관거 현황(경과연수별)

(단위 : km)

총계	10년 미만	10~20년	20~30년	30년 이상
10,291	2,404(24%)	2,274(22%)	3,904(38%)	1,709(16%)

- 대부분 품질이 낮은 70~80년대 설치(20년 이상 54%)로 노후도 심함
- 매년 300km 이상 정비, 연간 3,850억 규모 투자 필요(하수도정비기본계획)
- ※ 06~'11년 연간 평균 정비연장은 170km, 사업비는 1,500억원 규모

○ 사업목표

- 관거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과 함께 노후 하수관거 단계적 보수·보강 실시
- 시민참여 제도화로 지역맞춤형 정비 추진
- ⇒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

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12 ~ 2021(10년간)
- 정비내용 : 저지대 47개 배수분구 및 침수 피해지역 관거 우선 개량
- 정비연장 : 1,227km ※ 사업비 : 2조 855억원
- 정비방법 : 현장조사후 GIS 데이터 개선 및 노후불량 관거 정비
 - '14년까지 노후하수관거 213km 정비완료

기대효과

- 침수피해지역 및 안전을 저해하는 하수관거를 우선하여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현

5 공동구 설치 증장기계획 수립 및 공중선 지중화 추진

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관리를 위하여 지하공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도로변 불량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설치 추진

공동구 및 공중선 현황

- 공동구 : 32.8Km(6개소 : 여의도, 목동, 가락, 개포, 상계, 상암)
※ 한전 단독구 : 143.9Km, 통신 단독구 : 140.7Km
- 공중선 : 전신주(393,613기), 공중선(15,468km), 지상기기(17,473대)

추진계획

- 공동구 지하공간의 토지이용 증장기 종합적 계획체계 구축
 -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
 - 재원분담, 수용시설 표준화, 유지관리 방법 등 검토
- 연차별 지중화 계획 수립('12.3월)
 - 자치구별 수요조사, 한전·자치구와 정비협의체 구성
 - 안전위험, 경관지역, 문화재 보호구역 등 집중정비구역 선정 추진

문제점 및 장애요인

- 공동구 설치비 및 관리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수용기관의 참여 기피
-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 설치하는 지하 장애물 이설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 증가
- 지중화 사업 관련 법령규정 불분명 및 사업비 분담 규정 미비(제도)

개선방안

- 공동구 설치에 관한 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(국토해양부에 건의) 추진
 - 공동구 설치 및 관리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 또는 지원
- 공중선 지중화 촉진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
 - 지중화계획 수립 의무화, 전선에 점용료 신규 부과 등 도로법령 개정 추진

기대효과

-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하공간 활용으로 미래형 도시공간관리 기반 조성
-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안전 제고

4. 도시의 수준을 높이는 도로·보행환경 개선

①	보도시공 및 관리시스템 개선	21
②	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	22
③	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	23
④	지역 맞춤형 도로인프라 확충	24
⑤	권역간 소통능력 향상 및 접근성 개선	25

1 보도시공 및 관리시스템 개선

빈번한 보도굴착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도의 유지보수 강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

추진방향

-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보행공간 조성
- 보행장애물 제거로 보행친화적인 거리 조성
- 부실공사 근절로 평탄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

추진계획

- 보도관리 거버넌스 구성·운영
 - 시민(단체),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
 -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
 - 보행불편신고를 위한 SNS 활용 및 커뮤니티 맵핑 구축
- 보도관리 체계 정비
 - 보도블럭 관리 은행 구축·운영
 - 공무원 담당제 및 건축주 책임제 시행
 - 공사 실명제,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, 공사안내문(현장, 온라인)
 - 보행 불편사항 신속정비 및 굴착복구공사 개선
 - 보도 유지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
- 친환경 투수포장, 저탄소·저소음 포장공법 개발·적용

문제점 및 개선대책

- 시, 자치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및 시행의지 필요
- 시 지원금(특별교부금 등) 차등지급 검토
- 보도블록 관리 비전제시 등 인식전환 유도

2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

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 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도로포장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

사업개요

- 기 간 : '11.11.15~'12.03.15 (4개월간) → 24시간 상황실 운영·유지
- 대 상 : 8,142km (시도 1,152km, 구도 6,990km)
- 도로현황 : 시도 연장1,152km 면적 29.33km²

추진계획

- 강설에 따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출퇴근 시간 조정 협의 추진
- SNS를 통한 제설관련 시민의견 수렴 반영
- 강설 사전예측으로 선제적 초동 제설체계 확립
 - 강설 화상전송시스템,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시스템, 제설작업기지취약지역지정 운영
-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기동반 운영 추진
 -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0,588명, 자원봉사자 8,832명
-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도로파손 보수체계 구축
 - 도로파손 발생 후 보수 → 균열 등 파손 징후 발생 즉시 보수
 - 절삭 덧씌우기 보수방법 → 균열보수, 표면처리 등 예방적 보수 병행
 - 과학적 조사 분석 실시 → 포장파손 발생원인 보수, 도로 평탄성 확보
- 친환경 도로 포장
 - 저탄소·저소음 포장공법 개발·적용 및 폐아스콘 25% 이상 재활용
 - 포장상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서울형 투수블록 개발

문제점 및 대책

- 강설시 기업 및 공공기관 출·퇴근 시간 조정 미참여시 강제 방안 부재
- 도로포장정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

기대효과

- 강설시 시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
- 노후도로 정비로 평탄하고 정온한 도로환경 조성

3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

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 대책으로 상가 경쟁력 확보 및 시민불편 유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정비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

사업개요

- 지하도상가 현황 : 29개 상가 2,738개 점포
-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: 2,550개(가로판매대 1,284개, 구두수선대 1,266개)

추진계획

○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

- 지하도상가별 입지특성, 상권침체 원인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상가경쟁력 강화
-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경청을 통한 중·장기 활성화 지원방향 모색
- 상가별 컨설팅지원, 경영안정자금 알선, 점포별 디스플레이 자문

○ 노점에 대한 지역맞춤형 관리정책으로 전환

- 상생과 나눔의 노점 문화 조성 및 가로별 관리체계 제도화
- 생계형 노점 지원시책 적극 발굴

○ 시민불편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

- 시설물 운영자 및 주변상가 등과 합의를 통해 적정 이전장소 선정
- 버스정류장, 지하철역 입구 등 시민불편 가중 지역(100개소, '12.12월 까지)

문 제 점

- 장기간 상가 수의계약(3회, 13년 이상)에 따른 기득권 유지
-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매출 감소 우려 반발

개선방안

- 상가 또는 점포별로 상권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별적 지원 정책 추진
- 영업시설물 운영자, 상가상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및 설득

4 지역 맞춤형 도로인프라 확충

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구간 개선 및 차로수 부족에 따른 병목구간 확장 등 지역 교통 및 생활여건을 고려한 도로정비로 지역 생활 환경 개선

사업방향

-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정체 구간해소를 위한 확장 추진
- 주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대비 지역도로 개선
- 주변 교통 및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입체화 등 추진

추진계획

- 상습정체 생활불편 해소
 - 서부트럭터미널 앞('08~'13, 820억), 개봉역 주변('02~'13, 586억), 안양교 확장('06~'15, 738억) 등
- 교통량 증가 대응 지역도로 개선
 - 선사로~고덕지구('09~'13, 1,272억), 고척교 확장('12~'13, 202억), 겸재교 건설('03~'14, 1,136억) 등
- 역사문화, 생태녹지 회복
 - 율곡로 구조개선('08~'14, 854억), 아차산공원~구의공원('07~'13, 809억)

문제점 및 장애요인

- 율곡로 구조개선관련 자치구(종로구)의 설계 변경 요구
 - 터널입구 디자인 변경 요구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 필요
- 겸재교 건설에 따른 인근 학교(전동중, 휘경고)의 민원발생
 - 학교부지의 도로 편입에 따른 도로개설 반대 및 미점유방안 검토 요구

대책

- 자치구 및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시행
 - 터널 디자인(안)을 재검토하여 관계기관 방문 협의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재심의 등을 요구사항 검토 후 반영
-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 시행
 - 학교 운동장부지의 도로부지 점유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협의들 통하여 이해 설득 시행

5 권역간 소통능력 향상 및 접근성 개선

도시의 교통동맥인 도시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보강하여 권역간 이동성 및 지역 접근성 개선

사업개요

- 동서간 소통증진을 위한 강남순환도로 및 강변북로(성산~반포)확장 추진
- 한강상 교량(월드컵, 구리암사대교)개설로 강남·북간 연결성 확충
-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은평새길, 평창터널 등 민간 투자사업 검토

추진계획

- 동·서간 소통증진
 -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(22.9km)사업은 '07.07. 착공, 현재 공사중(36%)
 - 강변북로(성산~반포) 확장(11.6km)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추진
 - ※ 총사업비 9,880억원 중 6,840억원(용산4,088)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확보
- 강남·북간 연결
 - 구리암사대교('01~'13, 교량구간1.1km), 월드컵대교('96~'16, 1.9km)
-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자도로
 - 서북권 : 은평새길(5.7km), 평창터널(2.9km)
 - 서남권 : 서울제물포터널(7.5km), 서부간선지하도로(10.9km)

문제점 및 장애요인

- 현재 우리시 투자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강남순환도로 등 주요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및 사업 완료시기 조정 필요
- 강변북로 확장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결정 필요

대책

-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 및 계획일정을 상세 검토하여 투자 규모 및 일정 등을 사업조정회의를 통하여 결정 추진계획 확정
- 강변북로 확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범위 등 결정 후 사업조정회의를 통하여 투자계획 및 사업 추진일정 확정

5. 삶의 질을 높이는 물환경 조성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|
| ① |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추진 | 27 |
| ② | 악취없는 생활환경 조성 | 28 |
| ③ | 생활주변 하천 생태 복원 | 29 |

1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추진

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리시설을 개선하고,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대책 마련

□ 사업개요

- 고도처리시설 개량 391만 m^3 /일, 총인강화처리시설 설치 437만 m^3 /일
 -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 : 총인 2.0 → 0.5mg/L ('12. 1. 1부터 시행)
 - ※ 수질강화 : BOD 20→10mg/L, T-N 60→20mg/L, T-P 8→2→0.5mg/L
-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('13.6월부터),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('12.1월부터)

□ 추진계획

-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
 - 고도처리시설 : 중량물재생센터 등 4개 센터 완료('12.12월)
 - 총인처리시설 : 탄천('12.6월), 중량('12.10월), 난지·서남('13)
-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(1,105 m^3 /일, 약 4천억원)
 - 물재생센터 내 : '12년 기본계획수립, '21년까지 증장기사업 추진(1,105 m^3 /일)
 - 물재생센터 외 : '14년까지 CSO₂ 저감저류조 2개소 설치, 6개소 타당성 조사 및 설계
- 슬러지 처리시설 확충('14.4월, 2,300톤/일)
 - 중량 100톤/일 · 난지 150톤/일 건조시설 증설('12)
 -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비용부담(총 989억원, '12년 248억원)
-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('12.7월)
 - 목표수질(행주지점) : BOD : 4.1mg/L, T-P : 0.236mg/L
 - 단위유역별, 기초단체 단체별 허용용량 결정('12.7)
 -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추진('13.6부터)
-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
 - 시 : 녹사평역, 캠프킴 정화중(국비환수 49억원)
 - 국방부 : 캠프그레이(완료), 유엔사('12.6월 정화 완료예정)

□ 문제점 및 개선대책

- 고도처리공사 기간 동안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불가 ⇒ 예외적용 협의 완료(한강유역환경청, '11.12)
- 총인처리시설비 '12년 일부(난지·서남) 미반영 ⇒ 상류(탄천·중량) 우선 설치

2 악취없는 생활환경 조성

생활주변 하수관거, 분뇨 및 물재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사업개요

- 악취발생 하수관로 : 150km (전체 하수관로 : 10,291Km)
- 악취발생 정화조 : 약 6,000개소 (정화조 총597천개소)
- 분뇨 및 물재생시설 : 4개소 (중랑, 난지, 서남, 탄천)

추진계획

- 부패식 정화조 오수 공공하수관 배출
 - 정화조 공기주입장치 설치('12년 500개소)
 - ▷ 신 규 : 1,000인조 이상 의무화, 200인조 이상은 조건부여
 - ▷ 기존건물 : 행정지도
 - 시 및 산하기관 건물 300개소 설치('12~'14)
- 분뇨·물재생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차
 -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, 탈취시설 설치
 - 수집운반차량 청결관리 및 탈취설비,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대상 모니터링
-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
 - 주택가, 전통시장 주변 하수관로 물청소(150km), 간선도로 빗물받이 청소(346천개)
 - 진공흡입기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수관 준설방식 개선
- 복개하천 주변 악취발생 차단(24개소)
 - 차집관거 연장 설치, U자형수로 복개, 우수토실 시설개선

기대효과

- 생활주변 악취를 저감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 쾌적성 향상
- 공공처리시설 주변 악취해소 및 주민친화적 공공시설로의 이미지 개선

3 생활주변 하천 생태 복원

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성북천 등 19개하천 복원사업 추진
 - 호안정비, 유지용수 확보, 수생식물 식재 등 인공구조물 제거하고, 자연형으로 복원
 - 쉼터,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제공
- 중랑천 친수유량 공급
 - 중랑천 본류 및 수계 우이천 등 6개하천에 하천유지용수 공급(20만m³/일)
 - ※ 대상하천 : 중랑천, 도봉천, 방학천, 당현천, 우이천, 목동천, 대동천

□ 추진현황 및 계획

- 성내천등 12개하천 복원사업 완료
- 2012년 3개하천(우이,방학,당현천), 2013년 2개하천(고덕,세곡천) 복원
- 2013년 이후 2개하천 복원사업 추진(양재, 망월천)



복원 후 불광천



복원 후 목동천

□ 기대효과

- 도시의 치수안전도 및 하천환경 향상으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
- 도심과 외곽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회생
- 도시의 열섬효과 완화 및 녹지공간 증대

Ⅲ .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

1 물이용부담금 개선

관련근거 : 『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

현 황

- 징수금액 : 3조 4,253억원('99~'10) ※ 서울시 : 1조5,595억원(46%)
 - 용도 : 환경기초시설 확충, 상수원지역 내 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등
- 부과대상 :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(개인)
- 징수단가 : 수돗물사용 톤당 170원('99년 80원에서 점차 인상)

문 제 점

- 1급수 만든다던 목표 실종, 친수구역특별법 등으로 수질 악화 우려
- 수질개선을 위해 10년간 상류지역에 지원한 물이용부담금 효과 미흡
- 환경부 주도로 운영되어 지자체 의견 반영 곤란 등

개선내용

- 수변구역 특별법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협하는 제 요소의 정비
-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투명성 확보 및 협력적 체제 구축
- 서울시는 조례 제정 등으로 시민 공개와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 등

기대효과

- 도입 취지인 상수원 수질개선에 효율적으로 운용
- 기금의 집행,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

2 한강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분담금 개선

□ 관련근거 : 『한강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』

- 협약당사자 : 서울경기인천(환경부, 국토부 참여)
- 대상사업 : 쓰레기 분포조사 및 수거·처리, 수거선 건조·운영 등
- 협약기간 : 5년 (※ 1단계 '02~'06년, 2단계 '07~'11)
- 사업비 : 한강서울구간 26.4억원/년, 인천앞바다 55억원/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09년부터 하구쓰레기 수거처리비용 국고 지원(61억원, 환경부→ 인천시)
 - 지원된 국고의 배분 문제로 우리시와 인천시 의견 대립
 - ※ 우리시 : 국고 중 서울시 몫(22.8%, 14억원)의 금액 배분 요구
- 2단계 협약이 '11년 종료됨에 따라 3단계 협약 체결 필요
 - 타 수계와 비교시 한강수계는 3개 시도가 주관이 되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의 관심과 지원 미흡(국고지원비율 : 한강 13%, 낙동강 등 40%)

□ 추진내용

- 국고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(법무담당관, '11.12. 5)
 -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우리시 추진방향 결정
- 환경부에 인천앞바다 3단계 협약 추진 요청('11.12. 6)
 -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현실화 및 인천시 구간의 국고 지원 확대 추진

구분		현황	개선계획
총사업비 현실화	한강서울	26.4억원	44.3억원
	인천앞바다	55억원	82억원
인천앞바다 국고지원금 확대		11억원	33억원

□ 기대효과

- 기 지원('09~'11)된 국고지원금 반환 성공시 시 수입 확대
- 해당 구간의 쓰레기 처리사업비 현실화(시수입 확대) 및 국고지원금 전입 확대(시 지출 감소)

3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

관련근거

-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기획재정부)
- 하수도 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(환경부)

현황 및 문제점

○ 현 황

-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에 관한 국가의 책무로 지자체가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
- 서울시의 하수도사업은 전국 인구의 21%, 전국 하수발생량의 29%를 처리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
- 최근 상기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서울시 물관리사업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

○ 문제점

- 국고지원 없이 시 재정만으로 물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, 최근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단·지연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및 기존 시설유지에 어려움 발생

개선내용

-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지원대상에 특별시 포함 및 특별시에 대해서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 규정(보조금법률시행령 및 보조금편성지침 개정)

※ 광역시 하수도 사업별 국고보조율 현황

하수관거정비사업	하수처리장설치사업	하수처리수재이용
30%	10%(50%)	30%

※ ()안은 총인처리시설 국고지원율

4 공중선 점용료 부과근거 마련

현 황

-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2에 전주에 대한 점용료 기준은 있으나,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제1호에 전선은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이 없음

문제점

- 전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무질서하게 공중선(통신가공선) 등이 난립하는 원인이 됨
- 지중화시 새로이 점용료 부담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기사업자 등이 지중화를 기피함

개선내용

- 전선 등 가공선 점용료 부과기준 신설(도로법시행령 별표2 개정)
- 공중선 지중화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

5 공동구 설치에 관한 기본법 개정

관련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(공동구의 설치비용) ②항

현황 및 문제점

- 국가와 시장의 공동구 설치비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, 시행령에는 세부 지원기준 부재

개선내용

- 개별 설치비 초과분은 국가,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(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"공동구관리자"라 한다)가 각 50%씩 지원하도록 개정

6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정

현황 및 문제점

○ 현 황

- 도로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: '04년 대비 '11년 市 관리 도로시설물 10.2% 증가
- 유지관리 예산 비중 감소 : 시 전체 예산의 3.6%('98년) → 1.1%('11년)
- '12년 예산 반영률 : 유지관리 소요예산 1,480억중 1,055억 반영, 내진보강은 304억중 74억 반영

○ 문제점

- 노후시설물의 증가 : 20년 후 전체 시설물의 80%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물로 변화(공용연수 20년 이상 51%, 30년 이상 26%)
- 유지보수의 지연 : '06년 이후 정밀진단시 발견된 손상 중 21%가 예산부족으로 미보수

개선내용

-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(도시개발법 제61조 및 도시개발조례 제11조)